



고 경 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2000년에는 95만 8천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224만 7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증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로 인구의 감소 나아가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 발생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장애는 선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5.4%에 불과하고 90%가 질환(55.6%)과 사고(34.4%)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장애

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쉽지 않다.

장애에 대한 개념도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적 불행으로 부끄럼과 수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집 밖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장애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을 강조하는 재활모델이 등장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장애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고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는 사회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패러다임도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공공부조에서 사회서비스로,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적 욕구에

적합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장애인 교육 지원 강화 및 문화 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2,500명을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4,172명에게는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도 7개소로 늘리고 대형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안마수련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계속 발굴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현재 351개소에서 10,26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활성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보장구 제공을 확대하고 보장구 수요에 대한 통계 DB를 구축하며, 인증제 등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보장구산업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을 받아온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16개 시도 전체에 확대하였다.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제도

를 확대하였다. 신변처리, 가사지원 및 외출지원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2만 5천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하였다. 만 18세 미만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및 시각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아동 1만 8천명에게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지원을 위해 돌보미를 파견하는 장애아 가족 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고충상담, 가족캠프 등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160개소를 운영하고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만 5천명 전원에게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사업도 확대하였다. 장애수당을 43만 3천명에 대하여 월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1만 6천명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 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2008.4.11)하여 고용, 교육,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도록 하였다. 2009.1월에 “UN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함

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장애인 권익보장을 약속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등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등의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곤란, 낮은 소득수준과 사회적 인식개선 부족 등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우선 장애인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등 범국가적인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장애인의 보다 체계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제도,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 마련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장애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차이를 넘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